지상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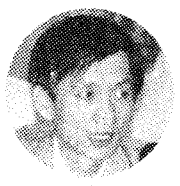
한방의료발전방안 정책토론회

한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바램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품질, 적절한 가격에 있다.

따라서 한약재의 품질인증관리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그런데 품질인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민간이 얼만큼 구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이냐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사업발달 정도에 따라 민간에 이양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해 볼만하다.



노 영 화
소비자보호원

품질인증관리제 필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한약은 가격보다 그 품질이나 효능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죽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약효만 있다면 그 값이 문제될 리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약의 약효가 예전만 못하다고들 한다. 또 농산물의 경우에는 무공해 작물 생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중이며 실제 생산돼 나오고 있다. 한약재도 이제는 양질의 청정 약재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건 품질의 규격화다.

따라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 36개 품목의 규격화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난 후 문제점을 더 보완해가면서 규격화품목을 확대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다.

한약재의 유통구조도 예전같지 않고 지금은 사실상 많이 단순화돼 있다. 생산농민의 손에서 생산자단체나 산지수집상에 의해 거의 수출입업소나 제약업소, 한방의료기관, 한약도매업소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 생산자단체를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농민 입장에서 보면 약재값 변동의 폭이 아침 저녁으로 다른 상황에서 한약재농사는 솔직히 투기사업이나 다름없다.

29개 품목만 남기고 모든 약재가 완전 개방된 현실에서 최소한의 재배이윤을 보장하는 계약재배나 국내산에 대한 완전수매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한약재값, 그리고 한약값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종 용
생약협회장

최소한 이윤 보장돼야

우선 이런 토론회에 한의학 관계자들이 빠져 있다는데 유감이다.

경동시장에 가 보면 여러가지 한약재를 값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만큼 안전하게 관리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고 학 용
조선일보

한의학 관계자 빠져 유감

그런측면에서 보면 한약재 유통의 개선방안을 통해 한약의 품질을 관리하고자 하는데는 공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약 규격화 36개 품목도 아직 미정착된 현실을 감안할 때 규격품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한약은 체험과학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한의사 개개인의 체험이 환자의 치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약의 규격화도, 한의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의학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시행돼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약재의 가격문제를 다룰 때 가장 원초적으로 생각안하면 안되는 대전제는 한약재가 갖는 본질적인 신비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것이냐 이다.

따라서 한방의 신비성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 태도를 갖고 앞으로 한약문제를 다루겠다는 점부의 확고한 정책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본다. 상위적 개념인 한방의 특수성에 대한 대전제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 여러가지 하부적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용 수
동아일보

대전제 우선 수립돼야

그런데 한방의 과학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통제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다.

한방처방에의 기술력과 각자의 신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한약재를 규격화해서 기존의 약방처럼 처방이 가능하지만, 각자의 신비성을 인정한다면 한약 그대로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금처럼 복잡한 구조를 형성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한약재의 가격문제가 상당히 경제학적으로 절근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 다소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약재의 품질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신약, 공산품과는 달리 한약은 수입산 국산의 가격차가 20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할 경우 국내 재배농가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 현재 규격품을 만들어 내는 1백50여개의 제조업소가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약재도 일반 농산물처럼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경매를 통해 적정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유 창 록
대한약공협조

한약재 가격편차 심해

모든것이 자유화 개방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한약유통만을 유독 정부가 지도 관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관리규정만을 정해놓고 사후 품질관리만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면 될 것이다.

녹용만 하더라도 관리규정에는 표준규격이 13㎝ 이하로 돼 있으나 실제 절편했을때 전문가가 아니고는 산지와 삭, 줏, 하대를 각각 구분하기 어렵다.

또 규격화품목을 현행 36개 품목에서 1백20개로의 확대 실시는 너무 성급하고 무리한 발상이다. 36개 품목의 규격화가 무리없이 정착되고 난 후 2㎝ 확대 실시해도 시설과 인력, 노하우의 축적이 36개 품목의 품질관리만도 실질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36개 품목의 규격화가 정착된 후 좋을 것이다.

규격화는 분명 좋은 제품이다. 그러나 종전의 약재값 보다 무려 1백50%의 원가상승요인을 유발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소비자부담만 가중시키게 될게 뻔하다. 최근 정부정책의 가장 큰 쟁점이 물가안정이라고 했을때 규격화로 인한 약재값 상승요인은 제고해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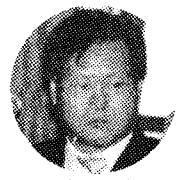
임 창 순
의수협회

정부, 사후관리 감독만

기본적으로 한약재의 유통구조를 체계화한다는데는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구체적 개선방안을 보면 농약에 대한 감시 기능으로서 행정적인 감시체계만을 제시했을 뿐, 품질적인 감시체계가 빠져있다고 본다.

품질인증제도에 있어서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하기 보다는 첩약을 한방의료보험으로 실시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다른 것과 달리 한약재값이 워낙 심하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8년 시범적으로 한방료보험을 실시했으나 이같은 폐해로 인해 지금은 엑기스만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한약재 값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국내 생산량분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완전수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같은 일련의 것들을 제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회기구가 필요하다.



한 오 석
의료보험연합

품질감시체계 누락

생산자단체를 통한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어느 특정단체(농협)만을 통한 공급은 자칫 독점가격 형성으로 인한 독점의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의학의 발전, 한방계 발전의 목적이 국민들의 편익증대쪽으로가 아닌 한약분야의 산업발전쪽으로 간다면 이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소비자들은 흔히 한약을 복용하면서도 오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한약의 임상효과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따라서 한약개발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러한 임상연구도 활발히 진행됐으면 한다.

이 규 식
연세대학장

독점가격 형성 우려

한의학에서 한약은 중요한 치료수단이다. 과거에는 한약처방에 쓰이는 모든 약재가 거의 자연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산재배산이거나 수입산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약을 살포해 재배한 것과 자연산은 그 효능이 전혀 다르다고 남용의 여부를 잘 모르고 있다. 이는 한약에 대한 정보제공의 메카니즘이 부재한 때문이다.

우리가 복용하는 한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른것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산을 어떻게 육성 수집, 보호하느냐, 그리고 인공재배 했을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자연산의 효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품종을 개량,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가격을 통제했을때 자칫하면 오히려 한약재의 수입을 부추기고 국내산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송 건 용
보건사회연구원

자연산 육성보급 시급

보급하는 차원에서 한약재의 가격정책이 제시됐으면 한다.

한편, 한약재 가격의 적정화는 결국 가격을 보다 저렴화 하겠다는 얘긴데 한약의